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4. 3. 13(목)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46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4-10-044~046)

### ○ 이경제 위원장

-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2페이지 <3>번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4년 1월 2월~2월 13일 기간 중 SK, KT, LGU+(이하 “이통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14년 1월 27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경과는 '14년 1월 27일~3월 10일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먼저 1월 27일~2월 28일까지 이통 3사 본사 및 유통망 현장조사를 했고, 2월 14일 이통 3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미래부에 제재요청한바 있고, 2월 28일 이통 3사에 게 시정조치안을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의견수렴을 '14년 2월 28일~3월 10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사대상은 이통 3사의 '14년 1월 2일~2월 13일까지 가입한 298만 9,000여건 중 7만 5,900여건, 즉 2.5%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전체 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59.8%, LGU+ 58.7%, KT 51.5%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 박스 가입형태별 위반율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통 3사 전체 평균보조금은 42.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LGU+ 44.2만원, SKT 43.6만원, KT 39.7만원 순이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평균보조금 수준은 전체 평균이 57.9만원, 사업자별로는 LGU+ 58.7만원, SKT 58만원, KT가 56.6만원 순이었습니다. 그다음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동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13년 3월 13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가 가능합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다음에 동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과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기준 과징금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기준 과징금은 이통 3사의 위반율 수준을 고려하여 SKT에 관련 매출액의 1.4%, LGU+ 1.4%, KT 1.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27일 제재 시에는 위반율이 3사가 62%~66%일 때 부과기준율은 1.6%~1.8%를 적용한바 있습니다. 필수적 가중입니다. 이통 3사는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5회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6회째이므로 총 기준 과징금의 40%를 가산하면 총 과징금은 합계 257억원이 됩니다. 추가적 가중입니다.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도사업자 선정·제재입니다. 주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1월 2일~2월 13일 기간 동안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 5가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별점을 산정한 결과, LGU+ 93점, SKT 90점, KT 4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도사업자 선정·제재방안인데 2가지 안으로 준비했습니다. <제1안>은 가장 별점이 높은 사업자 LGU+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 추가 가산 30%, 신규모집금지 14일을 부과하는 것이고, <제2안>은 별점 상위 2개 사업자인 LGU+와 S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하여 추가적 과징금과 신규모집금지를 차등 부과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LGU+는 과징금 추가 가산 30%, 신규모집금지 14일, SKT는 과징금 추가 가산 20%, 신규모집금지 7일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1위와 2위 간 3점 차이이고, 2위와 3위 간에는 46점의 격차가 나고 있음을 고려해서 <제1안>, <제2안>을 마련했고, 지난 12월의 경우에는 1위와 2위는 1점, 2위와 3위는 10점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만 확인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30일 이상 3사 순차 영업정지를 이야기할 때 신규모집금지, 그다음에 기변도 금지, 그리고 분실, 고장만 기변을 허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미래부의 45일 동안 분실, 고장 플러스 24개월 이상 단말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이번에 기변은 빠지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기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1안>일 때나 <제2안>일 때 신규모집금지만 하는 것이지, 기변은 빠지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제조사나 대리점이 숨통은 열리겠네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상대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지난번에 제재를 통해 미래부에 요청해서 오늘부터 45일간 영업정지가 시작되고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일부 주장들을 들어보면 “그때 조사했던 것과 이번 조사한 것과 중복이 있다, 중복 제재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할 당시에 여러 법무법인들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았습시다. 그때도 다수로부터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습시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미래부에 요청한 것은 전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따르지 않은 제재이고, 이것은 별도 기간의 위반사실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제재가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SK텔레콤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참석하신 이상헌 상무 맞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맞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조창노 영업본부장 맞습니까?

○ 조창노 SK텔레콤(주) 영업본부장

- 예.

○ 이경제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SK텔레콤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상현입니다. 거듭된 사죄와 다짐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대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심결 이후 정부에서도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 단기 조사 및 제재와 같은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도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저희 회사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분골쇄신해서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앞장서서 바로 잡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기간 시장의 고착화된 관행과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SK텔레콤 스스로 끊임없는 노력과 쇄신을 통해 나아지고 변화된 SK텔레콤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은 물론이고 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보완적인 기준과 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통신사업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ICT산업에 올바르게 기여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 순기능이 모든 국민들께 올바르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의 안건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지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그렇지요?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퇴임하십니다만 지난 3년 동안 몇 번 제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횡수를 말씀하시니까...

○ 김충식 부위원장

- 정확하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들의 임기 동안 5번이 이루어졌고,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시정이라는 것은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이익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눌하고 억울하고 아둔한 사람 몫을 뺏아서 약은 사람에게 주는 형태의 영업,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고 통신지배사업자인 SKT가 앞장서서 이번에 지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사업이라고 하는 정글의 세계에 도덕, 윤리 등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법과 행정의 요구하는 룰, 그리고 범법이 되지 않는 선 안에서의 노력을 주문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이미 다섯 차례나 이분들의 임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무력화되고 사업자들의 횡포라고 할까, 행패에 농락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과연 SKT, KT, LGU+ 같은 대기업들이 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과연 해야 할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SKT 상무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착된 관행'이 쉽게 바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만능이 아닌 부족한 인력과 장비로 애쓰는 행정,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 평균적인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정글 같은 사업 무대에서 뛰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청에 대한 존중, 룰과 법질서는 지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난번에 1점 차이로 1등한 것 기억나시지요?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때 뭐라고 했지요?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그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요?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번에도 1위 할 뻔했지요?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3점 차이면 1위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주도사업자를 가려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SKT가 통신사업계를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정말 잘못됐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귀 회사에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상생이라든지 같이 간다는 등 그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로 엉뚱하게 중소 제조업체라든지 또는 영세 판매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 이상현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영세사업자들은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도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

다. 이런 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2기 임기가 다음 주에 회의를 한 번 하면 끝납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통신업계를 끌어가는 SK텔레콤이 그렇게 전체를 끌어간다면 이를테면 질서가 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법이 이런저런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정책 위에는 대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SK텔레콤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위 사업자다운 행태,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 이상헌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실무진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주도사업자 1등이 93점이고, 2등이 90점 SK텔레콤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SKT가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적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반율을 보면 SKT가 59.8%를 위반했고, 2등이 58.7%로 1.1% SKT가 위반율이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상헌 SK텔레콤(주) CR부문 정책협력실장

-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특별히 지난번에도 1% 차이로 면제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1%도 넘었습니다. 주도사업자로 지적될만합니다. 더군다나 지배사업자인데 말이지요. 책임 문제에 있어서 부끄럽습니다. 의례적인 이야기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위로 된 쪽에서 위반 보조금 액수가 조금 더 높다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보조금이 57만 9,000원인데 SKT가 58만원, LGU+가 58만 7,000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0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수 매기는데 그것이 3점, 4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위반내용으로 들어가면 SKT도 주도사업자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도사업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특별히 해야 하고, 아까 홍성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영업정지 기간에서 풀리더라도 제조업체 중에서 영세 제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것이 직접 점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다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KT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KT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참석하신 김영호 상무 맞습니까?

○ 김영호 (주)케이티 Sales본부 무선판매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김만식 상무 맞습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 이경제 위원장

- 두 분이 똑같이 상무시네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KT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안녕하십니까? KT CR부문의 김만식 상무입니다. 우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KT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보조금 위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소명하게 되어 거듭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심결하심에 있어 KT가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로 선별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는 사실을 소명 드리고자 합니다. KT는 2014년 1월~2월 2개월 동안 번호이동 순감 총 4만 4,147건 등의 손실을 감수하고 귀 위원회의 보조금 정책에 순응하였으며,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단독 영업정지 이후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보조금 위반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귀 위원회의 정책에 순응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귀 위원회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천명해 오신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KT는 과열이나 위반을 주도하지 않고 본원적인 통신서비스 차별화를 통하여 시장 안정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이번에 수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KT는 상당히 보조금 경쟁에서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

했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 드리고, 그러나 지난번 평가에서는 KT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 2등을 다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KT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경쟁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을 텐데 최근에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KT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사건도 터졌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다고 문제시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그 2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로서 KT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KT에서는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말기와 유통 분리 관련된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뭔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회에서, 밖에서 많이 주문하고 정책 당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용자 차별이 일어나는 보조금 경쟁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석채 전(前) 회장이 정말 싸질러 놓은 오물처리를 하느라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뿐만 아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우리가 시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KT는 존재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까? 2등과 거의 50점차, KT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는 국악소녀 빼고는 KT의 존재감이 시장에서 없어졌다, 그런데 지금부터 KT가 일정하게 체력을 회복하고 나서 보조금 경쟁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석채 전(前) 회장에 의해서 어그러진 KT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보조금 싸움에 못 들어오는데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 김만식 (주)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하지 않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어쨌든 우리가 <제1안>을 채택하든 <제2안>을 채택하든 KT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1안>을 채택하면 14일, <제2안>을 채택하면 21일 KT에 기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참에 이석채 前 회장의 쓰레기 같은 행태들을 싹 치우고 다시 정상적인 본원적 서비스 경쟁에 KT가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이석채 같은 영업 행태들을 또 보이면 그것은 참 곤란하지 않겠는가, 100년 국민기업 KT의 새로운 위상을 위해서 정말 매진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만식 ㈜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감사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KT가 요즘에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앞으로의 개선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말기 구입할 때 아주 영세한 제조업체들 제품이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서 이것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보다도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만식 ㈜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만식 ㈜케이티 CR부문 공정경쟁담당 상무

- 감사합니다.

(KT 의견진술인 퇴장)

○ 이경재 위원장

- 다음은 LG유플러스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시켜 주십시오.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참석하신 강학주 상무 맞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양철희 상무 맞습니까?

○ 양철희 ㈜LG유플러스 SC본부 마케팅담당 상무

- 예.

○ 이경제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저희 회사는 귀 위원회로부터 다시 한 번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받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귀 위원회 제46차 위원회에서 총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또 다시 시정조치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대란, 211대란 등 사회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업자간 지나친 과열 경쟁을 벌인 결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화된 국내 이동전화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귀 위원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유통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에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와 요금인하 등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본원적인 경쟁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지난주 6일 미래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의 과열 방지를 포함하여 가계통신비 경감 등의 노력을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회사는 시장 과열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서킷브레이크 제도 등을 제안 드린바 있으며,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귀 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과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귀 위원회의 심결 직후부터 보조금 대란 등 시장 과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귀 위원회 및 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경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강학주 상무 모두발언을 내가 여섯 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중에 '방송통신위원회 노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결과로 이번에 제일 높은 위반에 오른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이번 시장 과열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과열 상황에 참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제약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올해 사회적으로 또는 정부에서의 엄중한 경고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 회사에 경영의 리스크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통위는 영업하는 분들에게 무슨 도덕이나 윤리를 지켜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을 지켜 달라고 한 것이지요. '최소한의 도덕'으로서의 법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서의 실정법은 지켜 달라, 그렇게 해서 이용자 차별에 의한 약탈적인 영업을 통한 순증 그런 것을 막아달라, 그런 이야기가 제 입기 중에 여섯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번 결과를 통해서 LG유플러스가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조금 전에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사실은 저희가 45일 동안 영업정지를 오늘부터 시작에 들어갔는데 45일만에 가장 중요한 숫자 중의 하나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을 지금처럼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잘 준비하고 이런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고, 그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리스크가 훨씬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엄중한 경고로 인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향후 사업, 또 영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LG유플러스 자체의 대책도 대책이지만 방통위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것입

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저희가 방통위와 쪽 제도를 만들 때 항상 사업자가 끌고 가는 부분, 사업자가 시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회사 내 입장들에 대해 귀담아 잘 들어주시고, 물론 모든 것을 다 반영시킬 수 없겠지만 잘 들어주시면서 일정 부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뭐냐 하면 과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자제되는 상황 하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 드리고 반영을 시켜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과징금이 LGU+에는 63.4억원이고 2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에 대해서 계산이 잘못됐다, 불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45일 영업정지를 받고 다시 2주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총 60일을 받다 보니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과징금,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타격을 받고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해하시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마지막으로 영업정지가 풀리게 될 경우에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LG유플러스는 LG전자 것을 주로 받으니까, 다른 회사 제품도 똑같이 받으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전부 다 받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특별히 영세 제조업체들 것을 많이 구매하면 국민들로부터 또 방통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퇴장)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가 지난 45개월 동안 수많은 시장조사 결과에 대한 영업정지, 그 다음에 과징금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총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영업정지가 떨어지고 나면 그날 보조금과 함께 시장이 훨씬 더 혼탁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타격이 아니라 이통사의 잉여금 축적의 수단이 되고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일정한 회의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팬택이나 제조업체 사장들이 또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충격들을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선처를 요구합니다. 특히 팬택 사장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울컥합니다. 사고는 다른 사람이 치고 피해는 다른 사람이 입는 이 구조, 그다음에 판매점, 대리점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들이 도대체 뭐냐, 위반을 하면 할수록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대한 불만들도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알뜰폰 시장이 확장되고, 그리고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우회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위반율이 1, 2위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말 이용자인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용자인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봐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불편함들과 함께 특히 팬택의 워크아웃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기기업의 생존에 우리가 위협을 가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고민하면서 기변을 빼고 신규모집만을 정지시키는 안들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판매점 문제도 판매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알뜰폰 시장의 확장으로서 우리의 조치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도적 사업자 하나만 잡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1점,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1등을 잡겠다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1점,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잡겠다고 했는데 2등, 3등이 50점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의 미세한 차이들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 3등과의 50점 차이를 중요하게 볼 것이냐는 측면에서 저는 2, 3등간의 차이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2안>을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저도 사무국에서 준비한 <제2안>을 지지합니다. 당초 주도사업자 처벌이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하나의 사업자를 선별해서 처벌하자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나타났다고 피 점수차가 아주 작을 경우에 이것을 얼마나 타당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둘 다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장에는 잘못된 메시지로 갔

던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하면서 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2등과 3등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1, 2등 간 선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혼란을 가중시킨 사람들이 확연하게 분리가 될 때에는 둘 다 처리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으로 사무국 의견에 지지합니다. 중소기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야 하는 방향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속에서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LG유플러스 피심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제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될 내용이고, 다음 기수 위원회가 들어서서 집행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차기에 넘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김충식 부위원장

- 두 분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번 LG유플러스에 대한 14일 영업정지, SKT에 대한 7일 영업정지에 찬성하고요, 제재시기는 차기 방통위원회가 현실에 적합하게, 현재 미래부가 진행하는 영업정지가 끝나고 시장상황을 살펴 가면서 내릴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홍성규 상임위원

- 대체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어제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과징금보다는 그 부분만큼 요금할인이 어떠냐는 이야기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무국 생각이 어떤지, 왜냐하면 자꾸 이 것이 이야기들이 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미래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해도 당사자인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 금액만큼을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으로 주자는 취지인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지금 <제2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찬동합니다. 그러면 이 안을 신규모집 금지일수를 LG유플러스 14일, SKT를 7일로 하자는 의견들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징금 부과 액수가 전전보다 4분의 1 밖에 안 되지만 이것도 필수적 가중을 40% 정도로 해서 올린 것이지요?

####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니까 총 액수는 적지만 위반에 비해서는 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도 자꾸 더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일수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보조금과 관련해서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불법보조금은 근절되지 않고 올해 들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통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단말기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의 경영악화와 생계 곤란의 이유로 규제 수준의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제2기가 끝나고 제3기가 들어서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지금 미래부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통신요금 연계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뭔가 현재의 방법대로 가는 것만이 능사냐,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주식시장에서 시장 과열에 따르면 거래 제한 제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식거래중단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거래량의 수준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방안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인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이전부터 몇몇 사업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통 3사와 함께 수차례 관련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본인들도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3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를 상한으로 해서 막을 것이냐 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3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이미 업체들과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몇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대개 동의하는 부분이고….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논의해서 방통위에 위탁할 수도 있고….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그 제도는 자체적으로….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스스로 이 정도로 자제하자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경재 위원장

- 제2기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음 제3기 위원회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7.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종편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일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음 주 초에 가급적 앞당겨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을 월요일로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8.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1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5분 폐회 】